

김영란법 몸조심...마을축제 잇따라 취소

“기부·협찬 저축될라” 북구 동림·임동 등 3개 축제 안열기로 주민들 ‘쌈쌈’...서·남구 ‘동민의 날’ 행사 추진 속 설왕설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여파로 동 단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예산을 마련,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마을 축제(동민의 날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자생단체들이 마을 축제 예산 마련을 위해 해온 기부·협찬 요청 행위가 자칫 김영란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서다.

주민들은 화합을 위해 연례적으로 개최 해온 마을 잔치마저도 법의 잣대에 따라 움츠러드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입장이었다.

6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동 단위 ‘마을 축제’ 4개 중 임동

‘아구 마을 임동 주민축제’(14일), 문흥1동 ‘문흥권 한마음 축제’(15일), 동림동 ‘동림골 강변축제’(22일) 등 3개를 취소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지 못한 가운데 각 동 축제추진위원회 별로 ‘우선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공식사회는 물론 동 자생단체들까지도 ‘몸조심’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축제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2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마

을 축제 예산이다. 재정이 열악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협의회 등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기업이나 상가, 단체 등을 상대로 해온 기부·협찬 요청이 자칫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동네 노인 초청 식사 대접과 경품 추첨, 기념품 증정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다.

특히 이장, 통장, 반장 등과 달리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위원들은 김영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무수행 사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각 동별로 축제를 꾸리는 축제추진위원장은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들이다.

해당 동 주민들은 우선 아쉽다는 입장이다.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나 주민 화합의 성격이 강한 마을 축제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박하게 변해가는 세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와 남구는 예정대로 동민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행사 과정에서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놓고 곳곳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마을 축제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법에 저촉되지 않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안전이 우선” 운전대 놓은 고령 운전자

최근 5년간 면허증 반납자 광주·전남 66.5%가 고령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 70% 가까이 고령 운전자로 나타났다. 노인 교통사고가 늘면서 안전을 위해 스스로 운전대를 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운전면허증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77명, 전남 99명 등 모두 176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이른바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은 광주가 67.5%인 52명, 전남은 65.6%인 65명으로 평균 66.5%나 됐다.

면허증을 반납한 10명 중 7명 가까이 노인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줄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9% 급증해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광장서 마당극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대전 극단 ‘우금치’가 마당극 ‘천강에 뜬 달’을 공연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연 상설화사업의 하나로 8일까지 매일 오후 8시 무대에 오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옛 도청 5·18기념관 건립은 노무현 정부 때 요구한 것”

5월단체 “당시 용역결과 제출...보수정권 출범 이후 묵살”

5·18 단체들은 “노무현 정부 말기 5·18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을 보존하고 그곳에 5·18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지만 보수 정권 출범 이후 이러한 요구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6일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옛 도청보존공간 예곡사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분석 보고서 중간발표회를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축이 5월단체가 이제와

서 옛 도청을 5·18기념관으로 만들자고 한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펴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5월 단체는 ‘광주문화수호 육성’ 관련 노무현 대통령 공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특별법, 5·18보존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5·18관련 공간(도청, 경찰청 등)만을 지상에 남겨둔 문화전당 설계 공모 당선작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옛 도청건물 보존은 문화전당 전체

설의 핵심 공간으로 예술관이 아닌 5·18기념관 형식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5·18재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8년 1월 5·18보존건물(도청, 경찰청 등)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사회 의견을 물은 뒤 5·18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문체부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5·18기념관 조성 요구가 묵살된 것은 물론 5·18 흔적 지우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광주지검 국감

광주지법 지난해 공무원 범죄 판결 97건 전국 최다

광주지법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처리한 형법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은 모두 97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 21건, 자유형(살형) 10건, 선고유예 3건, 무죄 3건 등이다. 전체 사건처리 건수도 광주지법이 전국 지법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살형 선고 비율은 사건 자체가 적은 울산·제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관대한 태도가 공무원 범죄를 빈발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5년간 선거사범 624명 재판...실형 선고는 23명

최근 5년간 광주지법에서 담당할 선거사범은 624명이며 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624명이다. 이 가운데 23명(3.7%)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는 재산형 445명, 집행유예 96명, 선고유예 40명, 무죄 10명, 기타 10명 등이다. 광주지법의 실형·집행유예 선고율은 전국 평균(실형 3%, 집행유예 12.5%)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 초석”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3년간 미제사건 527건...올들어만 481건

최근 3년간 광주지검 관내 미제사건이 5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새누리당) 의원의 광주지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 관내 미제사건은 2014년 14건, 2015년 22건, 올해 6월 기준 481건이다. 이 가운데 6개월이 초과한 미제사건은 2014년 7건, 2015년

10건, 올해 6월 기준 81건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범죄를 수사할 때는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 의원은 “전담수사팀 설치 및 운영, 지원환경 구축, 기록 보관방법 개선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사범 대처 미흡...10명 중 3명 꼴 기소유예 처분

광주지검 관내 마약사범이 최근 6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3명꼴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광주지검의 마약사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마약사건 발생 및 기소유예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마약사건은 5만224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주지검 관내에서는 1707건의 마약사건이 발생했다.

2010년 167건에 불과했던 마약사건의 수가 지난해에는 383건으로 129%가 증가했다. 광주지검의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율이 최근 6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소유예율을 보였다. 광주지검은 전체 1707건 중 540건을 기소유예 처분해 기소유예율이 31.6%다.

김 의원은 “기소유예처분 남발은 마약사범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스키니진 입은 여직원 성폭행한 사장 항소심서 유죄

“스키니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

○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3년 10월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L(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

○1심은 당시 A씨가 입었던 스키니진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에서 벗기기 쉽지 않은데 단추가 떨어지거나 옷이 찢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L씨가 사건 후 A씨에게 보낸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는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 /연합뉴스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번)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구도청 |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 본점 (062)223-5506 ■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